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99
----------	------

발의연월일 : 2025. 2. 7.

발 의 자 : 안호영 · 박희승 · 신영대
박 정 · 이학영 · 김현정
이춘석 · 정태호 · 김우영
윤준병 · 소병훈 · 안태준
차지호 · 정동영 · 이원택
김윤덕 · 이성윤 · 한병도
의원(18인)

제안이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빈번해지고, 탄소중립이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수급 체계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음.

특히 AI 산업 확산,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공급에 필요한 송·변전 설비의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와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의 건설은 지연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간 전력망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사업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업계획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명확히 하고,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시 정부는 관련 정보를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립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두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망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기본계획,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전력망 확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규정함(안 제27조).

사. 그 밖에 정보공개, 권리·의무의 승계,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설비”란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 5천볼트 이상인 송·변전설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육상과 해상 송·변전설비
나.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

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3.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전력계통”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육상 및 해양 전력계통을 말한다.

제3조(사업계획 주체) 개발사업의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립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전력계통 포화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

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을 따른다.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종합계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변전설비를 체계적·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발전원과 연계한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분석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국가기간 전력망의 체계적·효율적 확충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기반 및 전력망 설비 산업 생태계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7. 송변전설비 주변 환경의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의회 운영,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인허가 관련 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②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및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은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 입지선정 등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의견, 갈등·분쟁 중에서 전력망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동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딸린사업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규제 개선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력망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 전력망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지정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고시 또는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운영) ① 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의 장

2. 위촉위원: 에너지·자원, 환경·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기술,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② 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력망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망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기간 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등

제11조(국가기간 전력망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한 후, 제8조에 따른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송·변전설비 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발전원과 연계한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시·종점 세부입지)의 개요, 사업기간, 송전방식(지중화)에 대한 사회영향평가
3. 송·변전설비의 관리·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4. 송·변전설비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송·변전설비가 설치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송·변전설비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송·변전설비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항제2호의 확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민관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전원별 송·변전설비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민관협의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착수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기본계획 초안을 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열람하게 하고,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장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

제12조(기초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해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와 관련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를 필요한 서류

3.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인허가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4.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피해보상에 관한 서류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 어업권, 양식업권(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보상이나 매수계획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6.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

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은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수립, 신청 및 승인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시계획의 공고·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사업시행자

는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2(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입지선정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 입지 등 선호도 조사에 관한 사항
4. 후보 입지의 도출·평가·비교 및 최적 입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③ 위촉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대표의 위촉·참석 거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하고 입지선정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

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

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9.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임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13.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

가등에 관한 협의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1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9.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2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21.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2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3.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24. 「향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향로표지의 설치·관리의 허가 또는 신고
2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2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30.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3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

고

3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3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3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

축허가 등의 동의

②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장 개발사업 인허가 특례 등

제16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

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의 자료 요구 및 협조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입지선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른 기간 내에 입지선정이 곤란 또는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조정, 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만을 실시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20일 이내에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를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조정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 아니거나 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제19조(딸린사업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13

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건축물, 진입로, 임시작업장 등의 딸린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신고·지정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딸린사업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딸린사업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4호까지의 인·허가등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4. 그 밖에 딸린사업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력망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딸린사업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딸린사업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인·허가
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딸린사업 인·
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딸린사업 인·허가등
의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
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회신기간 내에 딸린사업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등의 처리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딸린사업 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조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력망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계획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 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원·보상에 관한 특례

제21조(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전을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지급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주변지역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조정·보상 등 종합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종합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23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등의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주민의 원활한 사업참여

와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상 설치 전력망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

3.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지원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가등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2. 제21조에 따른 특별한 지원
3. 제23조에 따른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4. 제25조에 따른 에너지 복지의 재정적 지원 등
5.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제27조(지방자치단체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망 확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개발, 행정지원,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의 장은 전력망 확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수용성 확보, 지역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직강화,

역량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등

제28조(전력의 우선 공급)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생산한 전력이 남은 경우에 역외로 송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전력거래의 방법, 전기공급의 절차 및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정보공개)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정보를 개발사업구역의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권리·의무의 승계) 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조치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

탁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제33조(과태료) 제12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입지선정을 진행중인 사업은 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해당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중인 발전사업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본다.

제3조(발전사업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9조에 따라 딸린사업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본다.